

KCGI·반도·국민연금 ‘지분매집’… 한진, 경영권사수 고심

한진칼, 3월 주주총회

총수일가 지분 24.79% 달하지만 경영권 두고 ‘남매·모자의 난’ 등 갈등 지속엔 재선임 여부 불투명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3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가 안팎으로는 주주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이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남매의 난’을 넘어 ‘모자의 난’까지 불거졌으며 단일 주주들은 지분 늘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는 누가 쥐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진칼의 전체 지분 가운데 총수일가를 제외한 단일 주주 중 최대 주주는 KCGI(강성부펀드)다. KCGI는 지난달 23일 기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외벽에 붙어 있는 그룹 로고 모습. /연합뉴스

15.98%에서 17.29%로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JV(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건설 6.28% ▲국민연금 4.11% 등이다.

총수일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각각 6.49%,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전체의 지분을 합하면 24.79%로 KCGI보다 월등히 많아 경영권방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윈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회장을 비판한 만큼 한진가의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후 조 회장은 어머니 이 고문의 자력을 찾아가 안쟁을 벌여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총수일가를 제외하고 3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반도건설도 최근 지분 늘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이 6.28%였으나 최근 추가 매입해 8~9%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다”고 말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인 사모펀드 KCGI도 한진칼의 지분을 늘려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이 기존 15.98%에서 17.29%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만 발표했을 뿐 재무구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기

준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종전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과 관련된 지분 중 ▲대한항공 11.36% ▲한진 9.62% ▲한진칼 4.11%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늘림에 따라 이번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지분율로 보면 일단 한진칼의 주주는 사내이사 재선임이 일반 결의사안이라서 과반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면 삼남매와 어머니가 합심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 불협화음이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갈라설지 안 설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이 아직은 4%대라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연금 입장에서 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1면 ‘김지형 위원자 내정자…’서 계속

윤종원, 노사갈등 수습 할 ‘내부인사 카드’ 만지작

IBK기업은행장

노조 저지에 일주일째 출근 못해 계열사 CEO, 부행장급 인사 집중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윤 행장은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본점 출근 길이 노동조합의 저지로 일주일째 막힌 가운데 윤 행장이 인사카드를 통해 노조와의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대표에 노조의 신망이 두터운 내부인사를 선임, 노사갈등을 수습할 것이라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서울 종로구 위치한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 행장은 사업부문별 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계열사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윤 행장은 우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은행의 부행장급 임원 인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총 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는 지난달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한시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고,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는 다음달 20일 임기가 종료된다. 기업은행의 부행장급 임원 인사도 시급하다. 연초 임기가 만료되는 부행장급 이상 임원은 5명이다. 임상현 전 무이사(수석부행장)와 배용덕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 부행장 등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최현숙 여신운영그룹 부행장의 임기도 다음달 20일 끝난다. 노조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탕평인사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후임 전무가 누가 될 지 관심이 다.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은행 실무 경

영을 총괄하는 2인자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따라서 후임 전무이사는 직원과 노조의 신망이 두터운 내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조원들은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윤 행장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총선이 열리는 4월까지 출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의 출근 저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계열사 대표와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무이사 후보군으로는 14명의 부행장과 계열사 CEO가 모두 거론된

<임기 끝나는 계열사 대표·임원>

·IBK기업은행 계열사 대표

계열사 대표	임기 만료 시기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2019.12.3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	2019.12.12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2019.12.14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	2020.02.20

·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

임원	임기 만료 시기
임상현 수석부행장(전무이사)	2020.01.20
오혁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2020.01.20
배용덕 개인고객 그룹장	2020.01.20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장	2020.01.20
최현숙 여신운영그룹장	2020.02.20

다. 기존에는 부행장 중 한 명이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임상현 현 전무가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에서 IBK저축은행 대표로 자리를 옮긴지 6개월만에 전무이사로 온 전례가 있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임원인사 수요가 지난해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은행장의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본부장 등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삼성 계열사간 협약 독립·자율 원칙설정 부패·위반 등 감시

이어서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과, 사회가 동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원장 자리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 계열사간 협약을 맺고 위원회 감시를 받게된다. 단, 위원회는 회사 내부가 아닌 독립 기구로, 업무를 도울 사무국 독립 운영 방법도 고민중이다.

기본 원칙은 ▲ 독립성과 자율성 ▲ 준법 감시·통제 ▲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 ▲ 전방위적인 준법감시 등 4개로 설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일감몰아주기나 뇌물수수 등 부패뿐 아니라, 노조 문제와 오너일가 승계 문제 등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를 운영할 위원도 내정했다.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그룹에서 선정한.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사회 대표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잡힌 견해를 견지한 사람 등 3개 원칙을 기준으로 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모든 권한을 삼성으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전-당기 감사인 갈등조율 협의체 만든다

금융위,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율 사실을 감안

해 제재 수준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충분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의 사유도 더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간단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은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율절차를 담당할 전기오류수정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조율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재용 기자 juk@